

# 표심 제대로 반영하고 호남은 1당 독점 벗어날 기회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여야가 '적기'를 맞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만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실질적 양당제였던 정치 구도를 다당제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는 정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중소정당은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그동안 양당제 구도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호남의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도입 필요 이유=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투표의 결과인 정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한국 정치의 대표성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행 선거제는 1인 독식의 소선거구 직선제와, 47석만을 정당 득표율 대로 나누어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당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의 1987년에 기원하는 이른바 '87체제'를 넘어서 한단계 도약하려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묻은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42%가 '좋다', 29%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또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에게 묻은 결과,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은 58.2%였고 반대 응답은 21.8%에 그쳤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내 1, 2당은 외면=일단, 선거제도 개편의 연내 합의가 1차 마지노선이다. 연내 합의가 무산된다면 내년 2월까지 합의점을 재차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 4월까지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미온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 여론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거대 양당은 슬그머니 판 소리 정의·평화 등 중소정당 도입 사활 호남정치 선택지 확대 등 유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가 쉽지 않자 현행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이른바 '절충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했다. 하지만 기존에 안주한 정치 공학적 접근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시대적 대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면서도 의원 정수가 현재의 300명보다 많아서 안 되고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60명 정도의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입장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원내 1·2당의 당리당략에 선거제도 개혁이 좌초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사활거는 중소정당=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결단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며, 이는 촛불정신의 완성이자 국민적 여망"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적 합의를 이뤘으며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 정치 지형 변화=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호남의 정치 지형에도 강력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호남 민심의 정치적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호남은 그동안 실질적 양당제의 정치적 불모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원내대표 6인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개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점미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제가 도입된다면 정당 득표율이 비례대표 의석에 적극 반영된다는 점에서 호남에서 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는 실질적으로 호남의 경쟁 구도 창출은 물론 민주당 등 특정 정당 독점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정치나 인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로 전락한 호남 정치권의 현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중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미온적인 것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소위 친노·

친문 등 영남 세력이 호남을 묶어두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호남은 양당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폭력을 가하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학교폭력 로그아웃 친구사랑 로그인  
친구야 힘들지... 네 곁에 내가 있어...  
혼자 고민 NO! 함께 나눠요~  
**학교폭력 신고는 117**

## 29만여명 찾은 전남수목비엔날레 교통·쇼핑 등 직접 경제효과만 210억원

관람객 71% "재방문 하고 싶다"

수목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한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실제 직접 경제효과가 약 210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25일 목포와 해남 일대에서 9~10월 두 달 동안 펼쳐진 수목비엔날레에 대한 평가 분석을 '(사)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남도관광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달 동안 전체 관람객 수는 총 29만3335명이었다. 이 가운데 목포와 진도지역 거주 관람객은 9만7387명(33.2%)이었고,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 관람객은 19만5948명(66.8%)이었다. 관람객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은 목포와 진도지역 거주 관람객은 교통비, 체험비, 쇼핑비 등으로 5만3770원, 외부 관람객은 9만7020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233억6000여만원의 직접 경제효과가 있었고, 외부 관람객의 타 지역 지출 비용을 뺀 실제 총 직접 경제효과는 210억원으로 분석됐다. 관람객 59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만

족도 평가의 경우 7.0점 만점에 5.38점을 기록해 높게 평가됐다. 2회 행사 개최 시 재방문하겠다는 응답 비율 역시 42.7명(71.5%)으로 높았다.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수목화 등에 관심이 많아서'가 321명(5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육·체험 및 전시 이벤트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99명(16.6%), '타 박람회와 차별화 되어서' 82명(13.7%) 순이었다.

관람객의 동반자 유형은 가족·친지가 316명으로 52.9%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체류 시간은 2시간이 198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3시간 132명(22.1%), 1시간 120명(20.1%) 순이었다.

전남 문화예술산업 발전 기여 여부에 대해서 364명(61%)이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전시관 및 프로그램 흥미도의 경우 5관의 디지털 아트체험(VR) 및 포토존이 5.71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4관 수목 목판체험 5.67점, 5관 윤리산방 수목화 체험 5.61점, 금붕미술관 전시 5.58점 순이었다.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남도 수목 역사를 알 수 있었다'는 응답은 343명(57.4%)으로 나타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문대통령 G20 순방...한미 정상회담 성사될까

내일부터 아르헨·체코·뉴질랜드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비롯해 체코, 뉴질랜드 방문 등을 위해 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을 떠난다. 이번 순방에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여섯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 어려움이 있지만 양측이 최대한(일정을) 맞추

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야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회담이 이어 두 달 만에 두 정상이나 시 만난다면 이는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북미는 한 차례 연기한 고위급회담을 재추진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고위급회담이 조속히 열릴 경우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에 잇따른 '대형 이벤트'를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향방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